+

시





주 정 민 전남대 대학원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문대학에서 연 구중심대학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공립대 학 체계를 갖추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은 직업훈련 중심의 2년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CCC), 교육중심의 4년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 그리고 연구 중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UC)로 구성돼 있다. 세 단계의 대학이 각각 뚜렷한 목적 과 기능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 기' 구상 역시 이 UC 시스템에서 착안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UC는 세계적인 명문대 학인 UC버클리, UCLA를 비롯해 10개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우리 나라의 지역 거점 국립대 10개교를 UC 시 스템처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는 발상이다.

UC 시스템이 벤치마킹의 모델로 거론되 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립대학임에도 불구하

캘리포니아 공립대학(UC) 시스템이 주는 교훈

고 유수의 사립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 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전 세계 학문 발 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UC 소속 10개 대학에서만 7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UC 시스템은 '평의원회(Board of Rege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nts)'라 불리는 26명의 이사회가 전체 대 학의 운영을 총괄한다. 이들은 주요 정책 과 재정 계획, 등록금 결정, 전체 총장 (Pre sident) 및 각 캠퍼스 총장(Chancellor) 임명 등을 담당하며, 대학 운영의 효율성 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주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과 등록금 수입의 일부는 각 캠 퍼스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 분된다. 통합 회계 기준과 재정 정책을 수 립하고, 연금 기금과 기부금 자산을 일괄 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도 UC 본부의 역 할이다.

UC는 단일한 재정 시스템뿐 아니라 연구 자원도 공유한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를 비롯한 대형 연구소와의 계약, 데이터 접 근, 장비 활용 등이 시스템 전체의 자산으로 운영된다. 학술 연구 결과는 UC 프레스(UC Press)를 통해 출판, 보급되고, UC 산하 6개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를 표준화해 상 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캠퍼스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UC버클리와 UCLA는 인문학, 사

회과학, 기초과학, 공학 등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며, UC샌프란시스코는 학 부 과정 없이 의학과 보건과학에만 전념한 다. UC데이비스와 리버사이드는 농업, 수의 학, 식품과학, 환경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UC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사명은 공공봉 사 (Public Service)다. 각 캠퍼스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연구 과제를 운영함으 로써 캘리포니아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있다. 2005년 설립된 UC머세드는 샌호아킨 밸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 환 경,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지역 성장의 거점 으로 자리 잡았다.

UC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 하다.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연합체를 구성 해 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협력 구조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각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환경, 문화적 장점 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으로 역할을 분담하 며, 캘리포니아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했

우리나라의 거점 국립대학들도 이러한 U C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운영 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과 문화적 강점을 반영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 연계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진정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인권도시 광주 민생 소비쿠폰 낙인 유발 잊어선 안돼

광주시는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2007년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 례' 제정,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창립 등 인 권도시로서의 역할과 인권 증진을 선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이재명 정부가 역점 시행한 민 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 선불카드 색상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소득과 취약계 층 여부를 노출시키고 말았다. 시민들에겐 충격 일수밖에 없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나 명백히 잘못됐다.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 다.이 대통령이 "즉각 바로잡으라"고 시정을 지 시했으며, 시는 임시방편 격으로 공무원을 동원 해 스티커를 부착해 통일하고, 카드 자체를 재 발급하는 등 혼란이 컸다. 강기정 시장이 기자회 견과 SNS를 통해 거듭 사과하며 사태는 일단락 됐는데 전국적으로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됐다.

이를 계기로 시는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 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 학 교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고, 수 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하는 등 낙인감을 유발한

사례 등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전면 개선하기 로 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 당·비례)이 사전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요구하 고 나섰다. 채 의원은 "인권은 시민이 갖는 권리 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광 주시와 산하기관이 '인권행정의 주체'로서 국가 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

민생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신분 낙인을 유 발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행정안전부와 논의 가 있었다 해도 책임이 덜어지는 게 아니다. 사 람을 구별짓고 차별하며, 또 자존감을 무너뜨렸 다. 광주시는 시민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선언 수준에 머 무르지 않고,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권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입 사·승진·퇴직 등 공무원의 전 주기에서 인권 감 수성을 내재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 심이 높은 광주다. 생활행정 전반의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되뇌여 야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 서민경제 회복 등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광주시가 7조6천823억원 규모로 편성, 시의회 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연계 된 지역 대표사업,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시 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책임있는 운용에 중 점을 뒀다. 실제로 민생활력·상생돌봄 등 4대 전 략을 설정했다. 전남도는 12조7천23억원에 달하 는 수준으로 인구감소 대응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차세대 AI로의 변 화를 이끌 인력양성·스타트업 육성, 대불·여수 국가산단 AX 전환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신규 로 추진한다.

내년 예산은 각기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본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와 도는 갈수록 어 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 운영에 고심하 고 있다. 광주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위원회 산업시찰 비용, 불요불급 한 예산에 대해 대폭 절감했다. 전남 또한 모든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 적으로 지원되거나,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 등 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황의 장 기화로 지방비가 대거 감소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까지 파급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다.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혁신성장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 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한계를 노 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 에서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위안 삼을 일이 아니다. 역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켜내고 증액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 고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전쟁이다. 지자체들은 역 대급 위기다. 돈은 한정돼 있고, 써야 할 곳은 많 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피부적으로 체감할 분야에 우선해야 할 비상 국면이다. 서민들은 경 기회복 둔화에 따라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잃어 버린 웃음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 고



이 원 영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광주지회장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광주지 회는 매일 광주 지역 어르신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살 피는 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이다. 우리는 오늘,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 가 사실상 무산되고 전남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정치적 논란 이전에 '복지 현장의 실무자'로서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표하고 자 한다.

다른 이들이 이 사태를 '미래 먹거리'나 '청 년 일자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이 것을 매일 만나는 우리 어르신들의 '미래 복 지' 문제로 본다. 우리에게 AI는 단순한 산업 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의 막대한 돌봄 수요 를 감당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 다.

우리 복지 현장에서 AI는 이미 먼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독거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 래주는 'AI 말벗'이며, 치매 고위험 어르신들 의 인지 저하를 늦추기 위해 복지사들이 함 께 씨름하는 '디지털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공약 파기에 대한 현장의 우려

다. 또한, 부족한 인력의 눈과 귀를 대신해 어 르신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응급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광주의 복지관들과 술이다.

특히 광주는 그동안 'AI 기반 스마트 시 니어 케어' 분야에서 전국적인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임해왔다. 광주시와 각 구청, 그리 고 우리 같은 현장 복지관들은 AI 기술을 어떻게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수많은 시범 사업을 통해 씨름해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1호 공 약'이었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는 우 리 현장 실무자들에게 남다른 의미였다. 이 는 광주가 선도해 온 'AI-복지 모델'을 국 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이 모델을 고도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컴퓨팅 인프라)을 지역에 심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20만 시 민의 서명에는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를 바라는 우리 복지 현장의 염원도 담겨 있었

그런데 이 공약이 갑자기 '광주'가 아닌 '전 남'으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5극 3특' 전략 하에 광주와 전남은 하나이기에 괜찮다고 하 지만, 우리는 이것이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부 지 변경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의 변경 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AI 컴퓨팅 센터의

핵심 기능이 광주가 주력해 온 '도시형 시니 어 헬스케어'가 아닌, 다른 분야로 전환될 수년간 데이터를 쌓아온 이 '현장'이 핵심 인프라와의 지리적·기능적 연결 고리가 끊 어지면서 AI 복지 정책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는 이미 돌봄 공백의 한계에 부딪힌 현장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일이다. 가파 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돌봄 인력은 턱없 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열악한 처우에 시 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AI 기술은 이 '돌 봄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행정 업무가 아닌 어르신과의 정서적 교 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핵심 열쇠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다. 20만 광주 시 민이 염원했던 '1호 공약'을 이렇게 쉽게 파 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광주가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AI-복지 테스트베드'는 이제 어 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나 지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부모 님 세대의 존엄한 노후와,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복지 정책'의 문제이 다.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 약 파기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광주의 어르 신 복지 현장이 소외되지 않을 구체적인 대 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2021~2025년

의료기관'다단계리베이트' 범행구조

총진료비137억원, 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 주는 경우 환자 알선에 해당 4 리베이트지급 의료기관 알선조직 (진료비의 (브로커 46명) (의료인 18명 25~30%) 직원 13명) 진료비 전직 보험 지급 설계사 주축, 의료기관 소개 2 진료용역

※특정치료를받으면실손

보험금청구 **-5**

6 보험금지급 환자 보험사 ⑦연합뉴스 자료: 서울경찰청

다단계 방식으로 의료 기관에 환자를 알선한 뒤 진 료비의 약 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조직원들 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 사기동대는 환자 알선조직 브로커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대표와 부사장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받은 뒤 '역(逆)리베이트' 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료인 18·직원 13 명)을 포함하면 검거 인원은 77명에 달한다. 다단계 조직은 2021년-2025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3천586회 환자를 알선한 뒤 결제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회사를 설립한 대표 A 씨 등은 하위 직급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줬다.

진료비가 1천만원이라면 팀장 15%(150만원), 이사 4%(40만원), 상무 2%(20만원), 전무 1%(10만원), 부 사장 1%(10만원), 대표 7%(70만원) 등으로 배분됐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 수만 약 3천명에 달했다. 알선환 자수, 진료비 등으로 실적 점수를 쌓아 승진하는 체계 도 마련했다. 조직은 전직 보험 설계사들이 주축이었 다. 보험업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이용해 1천만원

안팎의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의료 기관과 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 독자투고



11월13일은 전국 수험생들의 12년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을 치른 뒤 해방감을 맞은 수험생들 의 각종 일탈이 우려되는 날이기도 하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일부 학생들이 학업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우발 적인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이다.

청소년 범죄 유형은 각종 통계자료에서 보 듯 폭력이 가장 많고 절도·음주·무면허 등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청소년 주류판매와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사업장도 다

수능 해방감에 청소년 비행 우려, 새로운 기회로

수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청소 년 음주 제공의 경우 이를 제공한 업주의 2차 피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으나 죄의식이 빈약한 범죄 유형으로는 공 문서부정행사죄와 공문서위·변조다. 신분증 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하는 경우, 타 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할

위와 같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가정·학교·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 요하다. 가정에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음주·흡연 등 비 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야 하며 건전한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관심 분야가 다양한 학 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제공하여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 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교육,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순찰 하고, 편의점·술집 등 업주를 대상으로 불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주 력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 심을 기울여준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인 청소 년들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미래의 꿈을 향 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

※ 독자투고를기다립니다.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사회부 650-2040 T V 본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 진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

650-2006

650-2009

786-9488

설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 업 본 부 650-2007 축 650-2020

무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연합뉴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 (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